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18
----------	-------

발의연월일 : 2025. 11. 5.

발 의 자 : 정태호 · 한병도 · 이학영
이수진 · 백혜련 · 복기왕
박민규 · 박홍근 · 조정식
맹성규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폐지 또는 완화 시에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절차를 두고 있으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및 신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기존규제의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의 경우 기존 규제 체계가 신기술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혁신을 저해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규제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규제 신설 시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으

나, 규제 시행 후 실제 효과와 목적 달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가 부재하여,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나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기존 규제의 타당성이 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으로, 규제의 실효성 및 적정성을 심도 있게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시 심사 강화, 기존규제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 구축,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등을 통해 행정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시에도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의무화함(안 제7조의2 신설 등).

나. 규제의 목적 달성 여부 및 실제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의 개선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다.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를 위해 위원회가 정비 분야와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5 신설 등).

라. 공무원이 위원회의 심의·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후단 신설).

마. 규제개선 및 합리화를 위한 국제협력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
(안 제38조 신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를 “촉진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규제는 적절하게 유지·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이 조화롭게”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강화”를 “강화 등”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입법예고”를 “입법예고(행정예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시의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필요성
2.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적정성
3. 규제 폐지 또는 완화 외의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
4.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

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6.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기술규정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7. 규제의 존속기한·재검토키한의 설정 근거 및 미설정 사유

8. 그 밖에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미치는 영향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구체적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는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는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로 본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신설하거나 강화”를 “신설 또는 강화하거나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3항(제7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9조”를 “제9조(제7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 전단에 따라 규제의 신설·강화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는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3조”를 “제13조(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신설 또는 강화”를 “신설·강화 또는 폐지·완화”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를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거나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를”을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거나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을”로 한다.

제18조제1항에 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9조의5에 따른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2의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1조에 따라 정비한 기존규제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사후규제영향평가) ① 위원회는 규제의 목적 달성 여부 및 실제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 대상 규제를 선정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후규제영향평가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전문성 또는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 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에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해 규제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규제

2.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규제

3. 그 밖에 위원회가 사후규제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제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규제영향평가 요구 또는 의뢰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사후규제영향평가 결과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의 심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신산업 분야 기존규제의 정비) ① 위원회는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분야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규제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비 분야·대상 선정, 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의2. 사후규제영향평가 대상 규제 선정 및 사후규제영향평가 결과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

제37조제1항 중 “능동적”을 “적극적”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위원회의 심의·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규제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하여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교섭 및 협정 체결 등 협력체계 구축
2. 규제 개선 및 합리화에 관한 정보 교류
3. 규제 개선 및 합리화에 관한 공동 연구·조사
4. 그 밖에 규제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제10조,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입법예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존규제의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 법 시행 이후 제21조에 따라 기존규제를 정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u>촉진</u> 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u>촉진</u> <u>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규제는 적절하게 유지·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이 조화롭게</u> ----- ----- -----.
제2장 규제의 신설 · <u>강화</u> 에 대한 원칙과 심사	제2장 규제의 신설 · <u>강화 등에</u> 대한 원칙과 심사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u>입법 예고</u>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	② ----- ----- <u>입법</u> <u>예고(행정예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 ----- -----

야 한다.

③ · ④ (생 략)

<신 설>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생명·안전 관련 규제
의 폐지·완화 시의 규제영향
분석 및 자체심사 등) ①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
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필
요성
2.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적
정성
3. 규제 폐지 또는 완화 외의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
4.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에 따
라 영향을 받는 집단 및 국민
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
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내용
의 객관성과 명료성
6.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
8호에 따른 기술규정이 국민
에게 미치는 영향

제10조(심사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
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
기 전에 하여야 한다.

7. 규제의 존속기한 · 재검토기
한의 설정 근거 및 미설정 사
유

8. 그 밖에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국민의 생명 · 안전에
미치는 영향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의 구체적인 대상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생명 · 안전 관련 규제의 폐
지 또는 완화에 대한 심사 절
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부터 제4항까지, 제9조 및 제13
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규제
를 신설하거나 강화”는 “생명
· 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
나 완화”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는 “생명 · 안전 관련 규
제의 폐지 또는 완화”로 본다.

제10조(심사 요청) ① -----
-----신설 또는
강화하거나 생명 · 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u>제7조제1항</u>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서 2. <u>제7조제3항</u>에 따른 자체심사의견 3. <u>제9조</u>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③ 위원회는 <u>제1항</u>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 대한 규제정비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u><신 설></u> 제14조(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 -----. ② ----- ----- ----- ----- -----. 1. <u>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의2제1항</u>----- 2. <u>제7조제3항(제7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3. <u>제9조(제7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 ----- ③ -----<u>제1항</u> 전단에 따라 <u>규제의 신설·강화에 관한</u>----- ----- -----. ④ <u>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는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4조(개선 권고) ① -----
---	---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6조(심사절차의 준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上程)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

-----제13조(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 강화 또는 폐지 · 완화-----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심사절차의 준수) ① -----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거나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

② -----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거나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을-----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

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생략)

<신설>

<신설>

3. (생략)

② (생략)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의5에 따른 전략적 규제 정비 대상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2의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1조에 따라 정비한 기존규제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사후규제영향평가) ①
위원회는 규제의 목적 달성 여부 및 실제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 대상 규제를 선정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후규제영향평가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전문성 또는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 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에 사
후규제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해 규제 목적과 수
단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규제

2.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지속
적으로 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규제

3. 그 밖에 위원회가 사후규제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규제

② 제1항 따른 사후규제영향평
가 요구 또는 의뢰를 받은 중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연
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 전단에 따

<신 설>

라 제출된 사후규제영향평가 결과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의 심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5(신산업 분야 기존규제의 정비) ① 위원회는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분야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규제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비 분야·대상 선정, 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
다.

1.·2. (생략)

<신설>

3. (생략)

<신설>

4. ~ 7. (생략)

② (생략)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 공
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능동
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
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
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후단 신설>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능) ① -----

--.

1.·2. (현행과 같음)

2의2.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3의2. 사후규제영향평가 대상
규제 선정 및 사후규제영향평
가 결과의 적정성 심사에 관
한 사항

4.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 ---
-----적극
적-----

이 경우 공무원이 위원회의 심
의·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

<신 설>

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제38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규제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하여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교섭 및 협정 체결 등 협력체계 구축
2. 규제 개선 및 합리화에 관한 정보 교류
3. 규제 개선 및 합리화에 관한 공동 연구·조사
4. 그 밖에 규제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